

“경선 불복해 무소속 출마 도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민주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현실화될 경우 반드시 승리할 것”

경선 잡음과 관련 “전반적으로 공정성·투명성 과거보다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서 일부 잡음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경선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 위원장은 4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경선 과정에서의 일부 잡음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경선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만과 잡음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선출된 후보는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하고, 탈락자는 제도나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도 일부 불만이 제기됐지만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선 이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

인해 기간이 길어지고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지적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자 메시지 과다 발송 등 부작용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특포를 비공개 방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지만, 도당은 “사전에 정한 원칙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위원장은 “공개할 경우 밴드왜건 효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의 장단점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후보들이 경선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불복성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경선 참여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가 0.1% 차이로 하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경선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당은 남은 선거 일정과 관련해 “이달 10일 이전까지 대부분 경선을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전북 대통합 행보 ‘속도’

민주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 종교·노동계 등과 소통 시군 단체장 후보들과 협력 체계 본격화… ‘원팀’ 강조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예비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종교계와 노동계 시군 단체장 후보군,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대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전주교구 전주교구청과 원불교 전북교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도내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공동체 통합과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향후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등 종교계 전반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종교계가 지닌 도덕적 권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지역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군 단체장 후보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본격화된다. 이 예비후보

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연맹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과 한국노동총연맹과의 연쇄 면담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핵심 공약인 ‘내발적 발전’ 전략을 설명하며, 지역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 전북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라며 “종교계, 노동계,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전북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같은 당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5일 임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주민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민주 이원택 도지사·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역사 KTX 정차 공동 대응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등 지역 핵심공약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5일 만나 임실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공유하고, 임실역사 KTX 정차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후보는 △임실역사 신축 및 KTX 정차 △전국 이·통장 연수원 건립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 프로젝트 △365 농가소득 안정 실현(월급 받는 농민시대) △임실형 어르신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두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양측은 임실역사 신축과 KTX 정차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데 이어, 이원택 후보 역시 도지사 공약으로 제

시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후보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육정호 출렁다리 등 관광객 증가와 35사 단 방문 수요 확대에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KTX 정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택 후보는 “전남 지역과 비교할 때 전주~남원 구간 KTX 정차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임실의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간담회 이후 관촌 오일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임실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 갔다. /오만호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송승룡 이사장, 민주 도의회 비례대표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송승룡 부위원장(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송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출마 선언문에서 “기후위기와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전폭적이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점을 언급하며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하는 국가적 전환 흐름 속에서 전북이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 투자와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미래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이는 전북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기회”라며 “단순한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기반 산업 생태계로 연결시키는 정책적·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부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기반 산업 전환 지원 △친환경 에너지 입지 창출 △전북형 기후정책 모델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수소산업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북을 대한민국 기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전북의 운명, 도민이 결정… 김관영 지사, 선거 출마하라”

범도민대책위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대책회의(상임대표 나춘균)는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운명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회의 소속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넘는 전북 도민이 김관영 지사의 출마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지지 차원을 넘어 전북 정치 현실을 개선한 도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표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유력 후보가 최소한의 소망기회도 얻지 못한 채 배제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공정과 민주적인 경선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세력 중심의 정치 운영, 즉 사당화가 전북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먼저 김관영 지사에게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전북 발전과 대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전북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당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경선 시스템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는 ‘범도민 후보’로 당당히 나서 전북의 대도약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대책회의 측은 일부 후보 관련 사건 처리에서 중앙당의 판단 기준이 달랐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사안임에도 한쪽은 중징계를 받고 다른 쪽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등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판단이 경선 결과에 영

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특정 후보 측이 혐의 없음 결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당원들에게 일린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전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끝으로 “전북 민주주의를 지키고 도민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김관영 지사가 도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날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전북 농업인 1만4000여명 “농업,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농정 공약 이행 촉구… 이원택 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

전북 지역 농업인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거 때마다 농업 공약이 제시됐지만 당선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정책 부회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농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실현 가능한 농정 공약 제시

△청년농 및 휴게농 육성 최우선 반영 △농업소득 안정 및 가격보장 정책 강화 △기후 대응 농정 체계화 △농업인 참여 협치 농정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원택 후보가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하고, “모든 후보의 공약을 끝까지 검증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원택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양정무 후보가, 진보당 소속으로 백승재 후보가, 무소속으로 세무사인 김성수 후보가 이미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도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만호 기자

“아동 놀이권 보장·신체 발달 지원”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서동플레이파크 조성 공약 발표



다양한 체육 인프라가 포함된다. 임형택 등반, 슬랙라인, 파쿠르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자연을 활용한 창의형 놀이 공간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0억~120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교육청 협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운영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임 후보는 해당 사업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미래 자원이 될 것이라며, 익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예비후보 임형택은 “아동 놀이권 보장·신체 발달 지원”을 위한 ‘서동플레이파크’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서동플레이파크는 모험동 스마트에코타운 인근에 조성되는 복합 놀이·체육시설로, 수영장과 생존수영 교육장, 실내체육관, 천연전지 운동장 등

이후 “수소산업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북을 대한민국 기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